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개최

당일치기 회담 ... 고위급회담서 3개항 공동보도문 채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다. <관련기사 3면>

남북은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란 내용을 포함한 3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이날 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을 통해 4월 말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했다.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2007년 10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김정일 위원장 간에 열린 데 이어 3번째로, 11년 만이다. 또 지난 2000년, 2007년 평양에서 2박3일간 개최됐던 두 차례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당일치기' 회담을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내달 4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의견, 경호, 보도 관련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고위급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주요 의제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 등이라고 밝혔다. 남북 핫라인 설치와 관련해서 "앞으로 통신 실무접촉을 통해서 그런 실무적인 사항들을 협의해나가는 정도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측은 정상회담 의제 등과 관련해 상호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필요하다면 4월 중 후속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의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기타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급회담은 정상회담의 날짜를 확정하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종결 발언에서 "오늘 남북대표단이 보여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해간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조평통) 위원장은 "이번 발표로 북남관계의 활력있는 진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온 겨레에게 크나큰 기대와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해성 차관, 운영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표단으로 나갔고,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전중수 조평통 부위원장, 김명일 조평통 부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을 다음 달 27일 개최하기로 확정된 것과 관련, "날짜가 확정됐으니 주어진 기간 동안 회담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운명의 날...매각이나 법정관리나

채권단 "오늘 지나면 자율협약 절차 중단 ... 회생절차 신청"

노조 "조합원 총파업 ... 국내 업체 참여 공개매각 진행하라"

금호타이어가 '운명의 날'을 맞았다. 지역 경제계는 최악의 경우 '부도'와 '법정관리'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채권단)는 30일까지 금호타이어 노조에 ▲노사 합의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할 것과 ▲중국 타이어

기업인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동의를 요청한 상태다.

채권단은 앞서 1조3000억 원의 차입금 만기 1년 연장과 이자율 인하 등을 제시하면서 노사 합의로 '경영 정상화 계획' 체결 등을 요구해왔다. 기한 내 협의 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입금 연장 등 유동성 대책을 소급해 무효화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채권단 방침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움직일 수 없는 노사 합의 시한"이라며 30일을 못 박은 상태다. 그는 "이날을 지나면 '자율협약' 절차가 중단되고 대규모 채권 연체와 상장 폐지가 이어지면서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계속기업가치(4600억원)가 청산가치(1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청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해외매각에 대한 반대를 재확인했다. 조삼수 금호타이어 생산직 노조 대표회장은 2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더블스타외의 수의계약으로 진행중인 매각 방식 대신, 국내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매각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30일 광주공장에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열고 해외매각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문무일 검찰총장 "공수처 겹쳐서 수용"

검찰 영장심사 제도 유지돼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열고 "사법경찰과 검사가 수평적 사법통제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바꾸겠다"며 "검사의 사법통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경찰의 수사에 대해선 검찰의 사법적 통제 역할이 필요하며 "국가경찰의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사안을 두고는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4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출범

첫 원내대표 노회찬

국회 지형변화 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잠정 합의하면서 국회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제4 교섭단체' 등장으로 개헌 논의는 물론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임박한 4월 임시국회 현안 처리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 주목된다. <관련기사 4면>

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합의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 과제를 추진하는 데

에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양당은 국회에 등록할 공동교섭단체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약칭은 '평화와 정의'로 하는 데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는 장병완·노회찬 공동대표 체제로 하되, 국회에는 1명만 대표로 등록하기로 하고 먼저 노 원내대표가 이를 맡기로 했다.

또 양당이 각자 정체성에 따라 고유의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하되, 공동교섭단체는 국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공동대응과 '8대 정책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이날 상무위원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을 공식 의결했다. 정의당이 오는 30일 또는 3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합의

안을 최종 추진하고 평화당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보고 절차를 거치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이르면 내주 초 공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3개 교섭단체 체제에서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되게 된다.

현행 3개 교섭단체 체제에서는 제1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사실상의 '범(凡)보수'를 형성, 여당인 민주당을 압박하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법진보'로 분류되는 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면서 형식상 원내 구도는 진보와 보수 2대2로 맞춰지게 됐다는 평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일보

아파트 주택조합 사기 기승 ▶6면



신 팔도유람 - 경기도 술 여행 ▶18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